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오현정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oh@kiep.go.kr, Tel: 3460-1064)

차 례 ● ● ●

1. 최근 유럽 내 극우정당의 부상
2. 유럽 주요국 내 극우정당의 부상 배경과 현황
3. 극우정당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4.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 ▶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요 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정당이 총선 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에서 득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복지 혜택의 축소 등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국수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극우정당의 부상에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 극우정당들은 자국이익에 기반을 두고 유럽통합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현재 구제금융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자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극우정당은 공통적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와 반이민정책, 반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 EU 통합에 반대하는 반EU 정서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
 - 핀란드의 진짜 핀란드인당(TF),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슬로바키아의 자유연대(SaS) 등은 EFSF의 가용자원 확대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고 있음.
-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로화 사용국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중소국가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
 - 의원내각제 하에 연립정부의 형태가 빈번한 유럽의 정치 현실과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한 현 EU 운영체제 하에서는 국소적인 문제가 전체 EU 정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 재정위기로 인해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유로지역은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부재는 정책공조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재정위기의 대응과정에서 각국 간의 이견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회원국 내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 점도 강력한 정책공조가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함.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1. 최근 유럽 내 극우정당의 부상

■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정당(far right parties)이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유럽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동안 소수정당에 머무르던 극우정당들이 총선 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에서 득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올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서는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인 진짜 핀란드인당(TF: True Finns)이 200석 중 39석을 획득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구축함.
 - ※ True Finns의 득표율은 2007년 4.1%(의회 내 200석 중 5석 획득)에서 2011년 19.1%(39석 획득)로 급상승
- 프랑스의 극우정당 Front National(국민전선)은 올해 3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15%를 득표하여 사회당(PS), 대중운동연합(UMP)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마린 르펜(Marine Le Pen) 당대표는 2012년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
-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인 자유당(PVV: Partij voor de Vrijheid)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네덜란드 정당 중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0년 6월 총선에서는 15%의 득표로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
 - ※ 2010년 2월의 여론조사에서 자유당(PVV)은 네덜란드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복지 혜택의 축소 등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국수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극우정당의 부상에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위기로 긴축정책을 펴며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에 따른 내수감소와 실업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혜택의 축소에 따라 외국인과 EU 통합에 호혜적인 정서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극우정당은 공통적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와 반이민정책, 반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 EU 통합에 반대하는 반EU 정서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

- 극우정당은 2000년대 들어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보수층을 대변하며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시작함.
- 1990년대 유럽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극우정당들은 소수정당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9.11 테러 이후 반이슬람 분위기와 유럽 각국의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이민자 및 사회통합, 치안문제 등과 연계시켜 반이민정책으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함.
- 또한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EU 공동체 차원의 정책영역이 확장되고 동유럽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자, 자국의 정책주권 보호 및 고용보호를 주장하는 주권주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EU와 유로지역의 운영체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국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은 향후 EU 운영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간의 보다 밀접한 공조가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가 EU 전체의 개혁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지금까지 극우정당은 소수정당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소정당이 많은 유럽 정치 환경에서 연정을 통해 집권할 경우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EU 정책결정과정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정책사항의 경우 비록 연정을 통해 집권한 소수정당이더라도 EU 전체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존재함.
- 본고에서는 EU 주요 회원국 내 극우정당의 현황과 정책제안을 살펴봄으로써 극우정당의 득세가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 EU의 운영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유럽 주요국 내 극우 정당의 부상 배경과 현황

가. 극우정당의 부상 배경

■ 유럽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구제금융국의 방만한 재정운영,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경제적 측면의 위기이나, 그 이면에는 정치적 위기의 성격이 짙음.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의 정부는 사회복지, 연금, 고용정책 등의 분야에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많은 정치·사회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10~11년 동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정년연장, 교육보조금 및 실업수당 삭감, 학비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구제금융국인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공공분야의 임금삭감과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파업으로 내용을 겪고 있음.
- 2011년 2월,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신청과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로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 긴축 프로그램의 재협상을 제안한 통일아일랜드(중도우파) 당대표가 총리로 집권함.
- 그리스는 여론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추가 긴축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PASOK)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야당인 신민당(ND)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함.

■ 실업의 증가, 주택난 심화, 재정적자로 인한 복지 부문의 지출 감소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경제위기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극우정당들이 득세하기 시작함.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민자에 대한 여론악화로 인해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극우정당이 부상하거나 기존 중도우파가 보다 우경화되는 등 유럽의 정치지형이 변화함.
- 중도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도 반이민, 반이슬람의 정서가 확산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데, 영·불·독 3국 정상이 다문화 실패 선언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집시추방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도우파가 사민당 계열의 중도좌파에 대해 우위를 점하며 집권에 성공한 배경으로는 극우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극우경향의 유권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¹⁾

- 동유럽으로부터의 역내이민 증가가 고실업,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EU의 정책 및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 또한 발생함.
- 2011년 1월, 독일의 Allensbach 연구소가 시행한 여론 조사에서 대상자의 70% 이상이 'EU가 독일에 가장 좋은 방안은 아니다' 라고 응답함.

나. EU 주요국의 극우정당 현황

■ 유럽의 극우주의 세력은 소수 그룹 이미지에서 탈피해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해가면서 점차 제도정치권으로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덴마크 인민당(DPP)의 원내 진출을 시작으로 극우정당들은 2009년 노르웨이, 2010년 스웨덴, 2011년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선거에서 잇달아 세를 확장했으며, 네덜란드와 헝가리의 지난 선거에서는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함.
- 구제금융 참여를 위해 의회승인이 필요했던 핀란드에서는 2011년 4월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진짜 핀란드인당(TF)이 19%의 득표율을 기록함.

표 1. EU 내 주요 극우정당

국가	당명	위상 및 정당의 성향	정책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자유당 (FP: Freedom Party of Austria)	- 1999년 총선에서 27%의 지지(2위)로 52석(비례대표제)을 획득, 3위인 국민당(보수주의)과 연정으로 집권 - 기타 EU 회원국과 오스트리아의 외교적 관계가 냉각되고 국제적 비판에 따라 하이더(Jörg Haider) 당대표는 사임하였으나 FP는 연정에서 6석의 장관을 배출 - 2008년 9월 총선에서 34석(17.5%) 획득하여 원내 3위를 차지함. - 극우정당인 미래연합당(BZ) 또한 21석(9.2%)을 획득하여 극우파는 총 26.7%를 득표함.	○ EU 가입 반대(1994), 유로화 도입 반대(1998) ○ 오스트리아 사회복지 모델 강조 ○ 반(反)이민정책 및 터키의 EU 가입 반대
프랑스	국민전선 (FN: Front National)	-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17%(2위)을 획득하며 결선 투표 진출 - 2011년 3월 1차 지방선거에서 15%(3위) 득표(소선거구제의 특징상 의석 획득 수는 미미) - 2012년 대선을 위한 지지조사(2011. 3)에서 마린 르펜(Marine Le Pen) 당대표가 1위(23%)를 기록	○ 전통적 가치의 복원 ○ 외국인 이민제한/ 이중국적제도 폐지 ○ 유로존 탈퇴 및 EU 내 관세제도의 재도입 ○ 이라크 참공 반대

1) Boeri(2009. 6. 10), Tito. Immigration policy and the Left's defeat. La Voce.

표 1. 계속

국가	당명	위상 및 정당의 성향	정책
이탈리아	북부연합당 (LN: Lega Nord)	- 1994년 총선에서 8.4% 득표, 소수 연정파트너로 5명의 장관 배출(EU 출범 이후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 - 움베르토 보시가 당 대표로 2008년 총선에서 8.3% 득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연정에 참여, 4명의 장관을 배출 - 소득수준이 높은 북부지방에서는 1위 지지율 유지 ※ 2008년 총선 당시 지지율 현황: 베네토(Veneto)주 - 27.1% 롬바르디(Lombardy)주 - 21.6% - 이주민 유입 금지를 주창하면서 2010년 유럽의 회 선거에서 10.2%의 득표율을 기록함.	○ 이탈리아의 연방국가화 지지 ○ 지역간 자율권의 확대/ 북부 이탈리아의 분리 독립 ○ 반이민적 성향
네덜란드	핌포르퇴인 (LPF: Pim Fortuyn List)	- LPF는 2002년 5월 총선에서 17%의 득표로 26석(2위)을 획득, 기민당(CDA)과 연정을 구성 - LPF는 2008년 해체되었으나 빌더스(Geert Wilders)가 창당한 극우정당인 자유당(PVV: Party for Freedom)이 득세하기 시작	○ 이민자 출신 등록제 시행 ○ EU 역내 노동이동 제한 ○ 이슬람계 학교폐지 ○ 네덜란드의 문화정체성 강화(반 이슬람)
	자유당 (PVV: Partij voor de Vrijheid)	-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7%를 득표하였으며 2010년 6월 총선에서는 15.5%(24석)을 획득하여 의석이 2배 증가함. 원내 제 3당 등극 - 반이슬람 및 반유럽주의를 표방 -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성향 연정은 극우성향 자유당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영국	영국국민당 (BNP: British National Party)	- 영국 의회 의석(총선에서 1.9% 획득) 없으나 유럽의회 2명 진출 - 영국인만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영국의 순수성을 강조	○ 영국의 EU 탈퇴를 주장함. ○ 백인들의 권리옹호 및 홀로코스트 부정
독일	국가민주당 (NPD: Nation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2개 주의회 진출, 연방의회 진출에는 실패 - 2010년 독일국민연맹(deutsche volksunion, DVU)과 합당을 발표함. - 이외에 공화당(German Republikaner)도 극우 정당으로 볼 수 있음.	○ 유로화 사용에 회의적인 입장 ○ 외국인 유입 반대
핀란드	진짜 핀란드인당 (TF: True Finns)	- 원내 제 3당 - 2007년 총선에서는 4.1%에 불과한 의석을 차지했으나 2011년 4월 총선을 통해 19%(39석)을 획득함.	○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참여 반대
덴마크	덴마크 인민당 (DVP: Dansk Folkeparti)	- 원내 제 3당, 2007년 11월 총선, 13.9%(25석) - 2011년 9월 15일 총선에서는 일명 '브레이비크 효과'의 영향으로 좌파연정(89석)에게 패함. 우파연정은 86석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덴마크 인민당은 22석을 차지함.	○ 외국인 유입반대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 (SD: Sverigedemokraterna)	- 2010년 9월 총선에서 창당 22년 만에 첫 의회 진출, 5.7%(5석) - 신나치즘에 뿌리를 둔 극우정당임.	○ 다문화주의 반대
벨기에	플레미쉬 이익당 (VB: Vlaams Belang)	-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명의 의원을 당선시킴. - 2010년 총선을 통해 7.8%(12석)의 의석 차지함.	○ 플랑드르의 독립과 플레미쉬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반대하고 반유대주의를 표방

■ 최근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일명 ‘브레비크 효과’²⁾로 극우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좌경화가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여전히 우파성향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음.

- EU 회원국 중 16개 국가에서 우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5개 국가에서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좌우연정이 집권하고 있어 여전히 극우정당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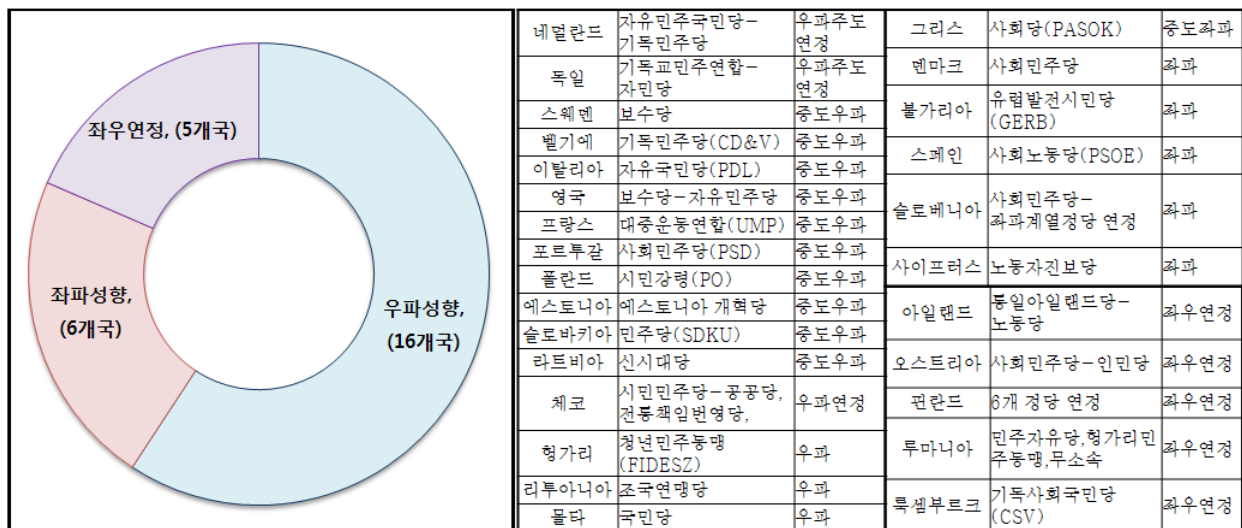
- 또한 2009년 당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친시장적 우파정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권자들은 우파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표시한 바 있음.

○ EU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극우파(주권주의, 유럽회의주의, 유럽 혐오주의)는 전체 의석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함.

※ 이탈리아의 북부연합당(9석 획득, 10.2%의 득표율), 네덜란드의 자유당(4석, 17%), 영국의 국민당(2석, 6.5%), 오스트리아의 자유당(2석, 13.1%), 헝가리의 요비크(3석, 14.8%), 덴마크의 국민당(2석, 14.8%) 등 극우당이 약진을 보였음.

○ 극우정당들은 치안, 이민, 고용불안 등의 이슈에 대한 강경발언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 유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EU 회원국 내 집권당과 성향



자료: 각종 자료 취합, 저자 작성.

2) 지난 7월 노르웨이 테러 용의자(브레비크)가 극우주의자였던 점에 근거하여 유권자들의 극우파에 대한 경계심과 우파 정권들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여 선거에 부정적으로 미친 효과를 일컬음.

3. 극우정당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가. EU 통합에 대한 극우정당의 입장

■ EU 통합과정에서 각국의 극우정당은 유럽정치의 주변부에서 소수정당으로 입지가 작았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능한 연정파트너로서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였음.

- 파시즘과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인해 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극우주의에 대한 경계가 강하여 중앙정치 무대에서 극우정당이 갖는 입지는 작았으나, 1990년대부터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EU 주요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기 시작
- 극우정당이 지지층을 넓혀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좌파정부의 정책실패(고실업, 저성장), 이민자의 유입, 세계화에 대한 경계와 유럽통합의 진전을 들 수 있음.
- 극우정서의 부상은 EU 기관인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2009년 제7차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34석의 의석을 획득함.
-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개별 국가의 의회에 비해 주로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국가의회에 비해 더 많은 극우정당 의원이 선출되는 현상이 발생함.
- 유럽의회에서는 9개국 출신, 25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 경제통합 이슈를 비롯하여 이민, 문화 정책 등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 극우정당의 등장배경과 이데올로기의 공통점은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 또는 저항임.

- 특히 EU의 단일시장화에 따른 역내무역, 노동이동의 자유화와 개별국가의 정책주권 제한, 통화공동체 완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준수 의무가 국내 정치·경제에 대한 외압으로 인식되어 극우주의 부상의 토양을 제공
- 유럽 극우의 등장은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확대와 심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극우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현상에 피해를 느끼는 유권자 층을 대변하면서 등장
- EU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극우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극우정당에게 의제를 선점당한 기존 정당들이 스스로 우경화되거나 집권을 위해 동맹을 맺는 현상이 발생
- 극우정당들은 공통적으로 EU 통합과 EU 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는 EU가 정부 간 접근방식의 운영에서 초국가적 운영으로 정책영역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임.
- 비판의 주된 논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① 세계화로부터 각국의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 ② EU 운영체계의 민주성 결핍, ③ 개별국가의 주권 침해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이민정책, 다문화주의, 전통 정치엘리트들의 부패, 과도한 세금부담, 실업문제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해결 능력 부재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EU 통합의 폐해와 연계시키는 패턴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EU 통합이 심화될수록 극우정당이 더 성장할 기회를 얻는 현상이 발생함.

나. 유럽재정위기를 둘러싼 극우정당의 입장

■ 극우정당들은 구제금융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자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유럽의 통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 EFSF를 이용한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로지역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나 일부 국가에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극우정당이 반대하는 경우 전체 구제금융 계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올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에 반대하며 제3당으로 부상한 진짜 핀란드인당(TF)이 대표적인 경우임.
- 올해 2월의 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EFSF의 가용자원 확대계획은 최종 논의가 6월까지 연기된 바 있는데, 핀란드의 연정구성 추이를 주시하기 위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
 - ※ 핀란드의 1, 2위 정당은 유로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연정구성은 하지 않겠다고 표명함으로써 진짜 핀란드인당(TF)은 결국 연정에 참가하지 못함.
- 핀란드의 진짜 핀란드인당(TF) 외에도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슬로바키아의 자유연대(SaS) 등은 EFSF의 가용자원 확대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고 있어 해당국 의회의 최종 승인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핀란드 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의 담보(지원금의 20%)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구제금융에 미온적인 자국의 여론과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진짜 핀란드인당(TF)을 비롯하여 집권 연정 내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
- 일부 정당의 강경입장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대한 해당 국가 정부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는 핀란드 외에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신임투표의 부결로 퇴진을 맞게 된 슬로베니아 정부가 단적인 예임.³⁾
 - ※ 지난 5월 일부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연정을 탈퇴하면서 장관직에 공석이 발생하였으며, 슬로베니아 정부는 신임장관의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시켰으나 9월 20일 투표에서 51대 36표로 부결됨.

■ 현재 유로지역 회원국 의회는 EFSF의 자원규모와 역할을 증대시키는 개혁안의 표결을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나 일부 국가에서 표결과정의 난항이 예상됨.

- EFSF의 개혁안은 지난 7월 21일 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으며, 각국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각국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 지금까지 EFSF는 구제금융 신청국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은 ① EFSF의 가용자원을 확대하고 ② EFSF가 비구제금융국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 하며 ③ 각국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EFSF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함.

3) EFSF의 가용자원은 총 4,400억 유로 규모이나 EFSF의 발행채권이 최상위 신용등급(AAA)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권발행 후 일부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함. 이는 EFSF에 참여하는 유로지역 회원국의 신용등급이 모두 AAA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이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2,500억 유로인데, 이번 개혁안은 총 가용자원을 7,800억 유로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자원의 규모를 4,400억 유로로 확대하고자 함.

- 당초 10월 말까지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 또는 연정 내 소수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표결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⁴⁾
- 프랑스(9월 7, 8일 하원, 상원표결), 벨기에(9월 14일), 이탈리아(9월 14일), 룩셈부르크(9월 15일), 스페인(9월 20일), 아일랜드(9월 21일), 슬로베니아(9월 27일), 핀란드(9월 28일), 독일(9월 29일)에서는 의회승인이 확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에스토니아에서는 10월 중 의회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표 2. EFSF 개혁안에 대한 유로지역 회원국의 입장 및 전망

국가	입장 및 전망
독일	- 9월 29일 하원에서 EFSF의 개혁안 통과(독 찬성 523표, 반대 85표, 불참 3표)
프랑스	- 9월 7, 8일 각각 하원과 상원이 표결함으로써 승인이 이루어짐.
슬로바키아	- 현재 연정(중도우파) 참가정당 중 하나인 자유연대(SaS)의 술릭(Richard Sulik) 당대표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승인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며 10월 중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
핀란드	- 극우정당인 '진짜 핀란드인당(True Finns, 제3정당)'은 구제금융 전반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음. - 9월 28일 핀란드 의회, EFSF 확대안 승인(찬성 103표, 반대 66표)
네덜란드	- 야당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루테(Mark Rutte) 총리의 기민당 계열 소수연정은 EFSF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극우정당인 자유당(PVV, 연정에는 불참여)의 지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네덜란드 정부는 일반적으로 EFSF의 규모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
슬로베니아	- 최근 정부에 대한 의회 내 신임투표 부결(9월 20일)로 중도좌파 연정이 퇴진하였으나 의회는 표결을 진행하여 9월 27일 승인(찬성 49표, 반대 4표, 기권 37표)
오스트리아	- EFSF 개혁안은 의회 내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하며 9월 30일 최종표결 예정

4. 향후 전망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로화 사용국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중소국가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함.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중도우파(기민당 계열)와 중도좌파 정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극우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에서는 연정을 통한 집권가능성 또한 낮음.
- 독일 극우정당인 국민당(NPD)은 일부 주(Länder)를 제외하고는 실제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1% 내외에 불과함. 프랑스의 국민전선(FN)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1, 2차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 프랑스 선거제도상 상·하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그러나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극우정당이 제3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연정을 통해 집권하거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4) EFSF의 가용재원 확대방안은 각 개별 회원국의 예산증액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개별 회원국 내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함.

- 의원내각제하에 연립정부의 형태가 빈번한 유럽의 정치 현실과 주요 결정에 대해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한 현 EU 운영체계하에서는 국소적인 문제가 전체 EU 정책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특징은 향후 재정위기를 둘러싼 유로지역 운영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나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바,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유로지역은 재정위기로 인해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바, 절실히 요구되는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공조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현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정책공조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나 각국 간의 이견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분담금 문제,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및 민간은행들의 참여문제 등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에 대한 각 국가 간의 이견은 리스크로 작용함.
- 회원국 내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 점도 강력한 정책공조가 어려워지는 배경으로 작용함.
- ※ 2012년 주요 선거일정: 핀란드(대선, 1월), 스페인(대선, 3월), 프랑스(대선 및 총선, 4~5월), 아일랜드(대선, 5월), 슬로베니아(대선 및 총선, 10월),
- 독일과 프랑스의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며 신임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과 강도 높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재정위기국 내에서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함. KIEP